

대한민국 인권시민사회단체(43개 단체)

일본, 96회차

2018. 7. 16.

참여단체(총 43개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
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어린이어깨동무,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영
화영상제작자협회, 하연화무용단, 심재민 어학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미국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호주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일본 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독일
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수원시민신문사, 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파이브, 남구평화복지연대, 학산포럼, 전주근로자선교상
답소, 여순항쟁 유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여수 순천 10.19 유
족회, 평화어머니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백마 주님의 교회, 씨알평
화교회, 은행정 책마당,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함께사람장애인독
립생활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아이쿱생협, 춘천영상공동체 미디콩, 일과놀이, 서울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 해외동포 민족문
화 교육 트윙크(부산동포넷), 대안교육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목차

I . 보고단체 소개.....	3
II . 서론 - 조선학교의 현황.....	3
III .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3
1. 불안정한 조선학교 학력인정.....	3
2.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	4
3.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	8
4.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배제.....	10
5. 일본 세관의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11
IV . 결어.....	14

I. 보고단체 소개

1. 보고단체는 일본 내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동등한 존엄성과 인권의 보장을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로, 종교, 여성, 노동, 법조, 이주, 난민 등 다양한 인권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일본 내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II. 서론 - 조선학교의 현황

2. 조선학교는 1945년 일제 강점기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학교로서, 재학하는 재일조선인들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조국에 대한 역사, 사회, 언어 등을 교육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역사 또는 일본사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이 일본의 교육제도와도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

3. 조선학교는 학교 설립 이전 국어강습소로 시작했을 때 약 500개에 이른 적이 있었으나, 일본정부의 강제 폐교조치, 각종 지원금 차별 등으로 학교의 수가 줄어들었다. 현재 일본 전국의 조선초중고급학교(유치원 포함)는 63개교(대학교를 포함하면 64개교)로 파악되고 있다. 63개교 중 10개교만이 고급학교로서 일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조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약 8,000여명에 이른다.

III.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1. 불안정한 조선학교 학력인정

A.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권리 침해 및 차별

4. 일본정부는 현재 외국인 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다양한 외국인 학교(미국계 학교, 한국학교, 중화학교, 브라질학교 등)의 졸업자는 공식적으로 일본 내 모든 대학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대학입학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5. 조선학교 학생들은 1994년부터 평등한 대학입학자격 인정 요구 운동을 시작했고 여론의 호응을 얻은바 있다. 2003년 3월 문부성은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 내 인터내셔널스쿨에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했다. 아시아계 및 중남미계의 외국인학교로부터 강한 비판으로 같은 해 9월 다른 외국인학교에게도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6. 하지만 조선학교는 위 수정된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과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 외교적 관계를 형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다른 외국인 학교와 달리 대학입학자격의 인정여부를 '개별 대학의 심사'에 맡겼다. 형식적으로는 조선학교에게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른 외국인 학교와 달리 조선학교는 개별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개별심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학입학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7. 이는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차별하는 것임과 동시에 일본 내 비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B. 제안하는 권고

-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졸업생들에게 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별 대학 및 전문학교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개별대학 및 전문학교는 조선학교 졸업생의 입학자격을 인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일본정부는 제도적으로 조선학교 졸업생들에게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해야한다.

2.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

A.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침해 및 차별

8. 일본정부는 2010. 4.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에 학비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공립고교의 경우 수업료 전면 무료, 사립고교의 경우 연간 12만~24만엔을 보조하는 제도). 2018년 3월 기준 10개의 조

선고급학교 외 외국인고교는 위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지원금을 받고 있다.

9. 고교무상화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특정부양공제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조선학교를 재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학교는 제도 도입이전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교육 보조금 또한 중단되어 조선학교의 재정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10개의 조선고교는 2010. 4.부터 현재까지 교육무상화제도에 따른 지원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했고, 피해자인 조선고교의 학생 수는 약 5,000여명에 달하며, 그 피해액은 17억 8200만엔 정도로 추정된다.

10. 일본정부는 철저하게 조선고교에 대해 교육무상화제도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고수했다. 결국 2013년부터 10개 조선고급학교 중 5개 학교(아이치, 오사카, 히로시마, 큐슈, 도쿄)의 학생 249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제도 대상으로 불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지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직접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11. 2017년 7월 히로시마(1심 패소), 오사카(1심 승소), 9월 도쿄(1심 패소)에서 잇달린 결과가 선고되었다. 패소한 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모두 항소했고, 승소한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항소하여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8년 4월 27일에는 아이치 1심 법원이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이치 패소 판결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2018년 9월 27일 오사카에서, 10월 30일 도쿄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아래 표1 참조).

<표1> 고교무상화 관련 소송 진행 현황

지역	원고	청구내용	소제기일	1심	항소심
오사카	오사카 조선학원	- 불지정 처분취소 - 지정 의무화	2013. 1. 24.	승소(2017. 7. 28.)	정부 항소/ 진행중
아이치	재학생 및 졸업생 10명	- 국가배상	2013. 1. 24.	패소 (2018. 4. 27.)	원고 항소/ 진행중
히로시마	히로시마조선학원	- 불지정 처분취소 - 지정 의무화	2013. 8. 1.	패소(2017. 7. 19.)	원고 항소/ 진행중
	재학생 및 졸업생 110명	- 국가배상			
후쿠오카	재학생 및	- 국가배상	2013. 12.	진행중	-

	졸업생 68명		19.		
도쿄	재학생62명	- 국가배상	2014. 2. 17.	패소(2017. 9. 13.)	원고 항소/ 진행중

12.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아이치, 히로시마, 도쿄 지방재판소는 일본 정부가 이번 정부보고서 169-172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학교가 조총련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부적절한 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채택했다. 이는 조선학교에 대한 악의에 찬 선전이나 의혹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제 도로부터 배제한 것이다.

13.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재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조선의 역사와 언어의 교육 등 재일조선인이 가진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영역에 있어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4. 조선학교 학생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고교무상화제도에 배제되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조선학교 학생들, 시민단체, 이에 동조하는 일본인들은 집회 등을 개최하여 일본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귀 위원회도 역시 지난 심의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일본정부에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아래 <참고1>은 진행중인 소송 당사자 학생들의 발언이다.

<참고> 고교무상화 관련 소송 당사자 학생들의 발언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김00(조선학교 학생)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일본인이지만, 이들은 일본인의 일부일 뿐, 우리의 집회를 응원해주는 일본인도 많습니다. 일본에는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북한은 나쁜 나라”라는 이미지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거겠죠. 그러나 역사나 여러 관점을 공부하고 자신의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조선학교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원고가 된 것은 학년 위원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런 책임감이 아니라 평범한 조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고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보고 저도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인터넷에 제 이름이 나오고 큰 일이 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되었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싸울 수 있

고, 제가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조선학교란? 그리고 고교무상화 투쟁에 대한 나의 각오

강00(조선학교 학생)

저는 오사카를 사랑합니다.

오사카의 거리,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오사카에서 저는 유치원부터 13년간, 우리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말, 우리의 역사를 배웁니다.

저는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학교를 다녔으니 만난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와 주신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이 수년 동안 저는 오사카에서 나가라, 싫거든 일본학교를 다녀라, 일본사람이 되어 살아라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우리 학교에서 자기 나라 말과 역사를 배우고 조선사람으로서 살고 싶을 뿐인데 어째서 저희들을 제외하려 하는지 어째서 인정을 안 하는지 답답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입는 치마저고리는 통학할 때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2교복이란 교복을 입고 통학 합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헤이트스피치, 그리고 무상화 재판, 보조금 재판을 보니 당당히 사는 게 이렇게도 힘든지, '순도100%'가 아니라는 왕따 당하는 듯한 최근 뉴스를 보니 더, 더욱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고교무상화재판 오사카 1심판결 승소 후 저희들은 손잡으며 열싸 안고 울었습니다. 끝내, 끝끝내 저희들의 존재가 인정받게 되었구나 하고 이 일본사회에 존재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차별은 차별을 낳습니다.

그 이외는 아무 것도 생산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차별 받아 마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재일코리아의 역사는 투쟁과 연대의 역사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4년 동안 재판을 위해 저희들과 함께 싸워 주신 변호사 선생님들, 일본 지원자 분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들...여러분들의 길고 긴 투쟁과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모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성원이 힘이 되어 우리는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밝게, 힘 있게 사랑하는 우리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우리 학교를 다닙니다.

저는 오사카가, 일본이, 그리고 세계가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당연한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이 될 것을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한사람으로 되려고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겠습니다.

저는 저를 조선 학교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학교의 미래는 반드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 오사카에서, 일본에서 조선학교를 다니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본명으로 당당하게 살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살며,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사는 그런 훌륭한 사회가 오기를 염원하면서, 저는 그것을 위한 징검다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백절불굴의 투지로 저희들은 싸워 나갈 것입니다.

B. 제안하는 권고

- 일본정부는 즉시 고교무상화제도 적용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해야 한다.
- 일본정부는 고교무상화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발생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배상 및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 일본정부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UNESCO) 교육 차별 금지 협약 (1960)에 가입한다.

3.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

A.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보장의 권리 침해 및 차별

15. 조선학교는 '각종학교'로서 학교가 속한 지자체가 주는 소정의 '교육보조금'을 받게 되어있다. 이는 각종학교 인가를 획득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꾸준히 실시되어 왔다. 2010년 4월 고교무상화법이 시행되고 조선학교만이 유일하게 제외되어 무상화 대상 '적합 심사'를 국가가 인정한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받게 되었고, 심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던 중 2010년 9월 도쿄와 오사카의 지자체 지사들은 지역 내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 중단을 결정했다. 도쿄와 오사카의 조선학교는 유, 초, 중, 고, 대학까지 총 20개가 넘어 전체 조선학교의 1/3에 해당하는 숫자다.

16.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보조금 동결 및 축소를 이어 오면서 2018년 현재 16개 도도부현에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 중 조선학교가 있는 곳은 27개이다).

17. 특히, 2018년에는 효고 현 소재 고베조선고급학교의 교육보조금이 1/2로 축소되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축소되다가 이번 년도에 대폭 삭감되었다. 현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교원 면허’ 소지가가 교원의 2/3를 넘어야 한다는 것인데 조선학교는 각종학교로서 교원면허를 소지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일본법의 어디에도 없다.

18. 교육보조금 미지급 건과 관련하여 오사카 조선학원은 2012년 9월에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무려 5년의 시간이 흘렀고, 2017년 1월 26일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8년 3월 20일에는 2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사카 지방정부는 ‘초상화 철거’ ‘총련과의 단절’ 등 조선학교의 이념상 불가능한 조건을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조선학교 측의 보조금을 동결했다. 이는 명백히 조선학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한 차별이자 인권침해행위이다.

19. 귀 위원회는 지난 심의에 일본 정부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의 재개 및 유지를 촉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보고서 175에서 정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 지급을 재개 또는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6년 3월 29일 보조금을 지급해온 2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선학교의 보조금지급 정지를 촉구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귀 위원회의 권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이자, 조선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시한 것이다.

20. 교육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조선학교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사회보장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이자 조선학교 학생들이 가진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B. 제안하는 권고

- 일본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을 지급을 요청하고, 이를 입법 등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일본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 지급 축소 및 정치를 통지를 한 경위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조선학교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법적배상 및 보상을 보장해야한다.
- 일본정부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UNESCO) 교육 차별 금지 협약 (1960)에 가입한다.

4.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배제

A. 교육을 받을 권리, 보육을 받을 권리 등 침해 및 차별

21. 오사카 시는 2016년도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이를 확대해 4세도 포함하여 교육비를 무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의 대상에서 오사카시 내에 소재하는 7개 조선유치원 만이 제외되었다. 시에서는 <참고2>와 같이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2> 오사카시의 ‘유아교육의 무상화’ 정책 설명

*** 유아 시기는 생애에 걸친 ‘자기실현’을 지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도덕심, 사회성, 지성, 체력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가야말로 ‘모든 아이들’이 가정의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아이들의 유아교육의 무상화 실현을 향해 2016년부터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해 왔다. 2017년부터는 지금까지의 5세를 포함한, 4세 유아 또한 교육비를 무료로 한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인가 외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도 대상으로 한다.

22. 조선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들 역시 ‘자기실현’을 지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시가 조선유치원의 아동들을 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조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다.

23. 위와 관련하여 항의를 위한 집회가 구상되었지만, 지진이 발생하여 실제 개최되지 못하였다. 아래 <참고3>은 조선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의 무상화> 정책 배제를 항의하기 위한 집회 포스터이다.

<참고3> 조선유치원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배제 항의 집회 포스터



B. 제안하는 권고

· 일본정부는 오사카시 등 유아기에 있는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선유치원 아동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해야한다.

5. 일본 세관의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A. 사생활의 권리 등 침해 및 차별

24.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 세관에서 2018. 6. 28. 북으로의 수학여행 귀환 시에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입국하던 고베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의

기념품, 선물 등을 공항 세관이 대량 압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 일본 세관은 ‘대북 제재 물품’이라며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인도적 물품’에 대해서는 관행으로서 반입을 허용해왔다. 고베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이 압수당한 총 물품은 177점으로 약 12만 1,000엔에 해당하는 물품이었다(1개당 평균 684엔에 불과한 물품이었다). 압수당한 물품은 기념품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후배들과 부모, 선생님에게 줄 문구가 달린 소박한 쿠션, 노리개, 필통 등이었다.

26. 분노한 학생들의 부모와 선생님들은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재일조선인총연합(이하 총련)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했다. 한국에서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을 중심으로 국내와 해외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명을 받아 2018년 7. 3.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불과 이틀 동안 위 항의서한에 285개의 시민단체가 연명하였고, 서한은 일본대사관에 전달되었으나 현재까지 일본 정부 및 세관의 공식 답변은 없다.

<사진> 일본 세관의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에 항의하는 한국 시민단체





27. 이후 2018년 7월 10일과 12일 오사카 조선고급학교와 도쿄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 귀환이 있었으나 기념품 압수는 없었다. 이는 일본 정부와 세관의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8. 조선학교 학생들이 조국에 해당하는 조선인민주의공화국에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지하고 있는 물품 들을 압수하는 것은 명백하게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일본 정부 및 세관의 공권력 남용이자 사생활의 권리 침해이다.

B. 제안하는 권고

- 일본정부는 일본세관에게 압수한 물품을 모두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반납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압수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일본정부는 향후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IV. 결어

29.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2014년의 권고를 일체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30. 2002년 일본인 납치문제 이후 일본정부 특히 아베정권은 정치적 도구 또는 인질로 ‘조선학교’를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다. 일찍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여 일본 내 재일조선인 권리 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와 탄압을 행할 뿐 아니라 만경봉호 입항을 금지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재일조선인들의 자유롭고 인도적인 방문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조선학생들은 조국인 북으로의 수학여행을 중국을 거치는 비행기로 가야만 했다. 재일조선인은 북이 아닌 다른 나라에 출국 시에도 세관에서 북조선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했으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2018년에는 수학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의 선물과 기념품마저 압수했다.

30. 일본 정부 스스로 ‘평등한 교육의 기회’라며 시행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에서 유일하게 조선학교 만을 배제하였고, 8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정부가 임명한 교육전문가들조차 부족함이 없음을 인정한 조선 고급학교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수장들이 공공연히 ‘정치적 외교적’ 이유를 들어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교육보조금 문제, 유아 무상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거의 대부분의 차별이 일반 시민들의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조장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제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31. 귀 위원회는 전 세계에 더 이상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일본도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라는 수 차례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고교 무상화 제도 적용 차별, 교육보조금 차별, 학력 차별, 유아 무상화 차별 등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함에 그치지 않고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를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마땅하다.